



## 세계 노사정 소식

### 미국

#### 미국 : 뉴욕 주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 착수

뉴욕 주 검찰청장이 몇몇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사용자와 본사에 대해 이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속여왔는지 여부를 내사 중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 주 검찰청은 다른 패스트푸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내사 중에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이름, 위치,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청장은 이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했는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업무상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후 변제가 이뤄졌는지, 또는 급여명세서에 위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원인 슈나이더만 검찰청장이 시급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들을 적발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의 일부로 이뤄진 것이다. 2011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슈나이더만 검찰청장은 노동법을 위반한 약 24개 기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또한 뉴

욕 주의 몇몇 세차장 소유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데미언 라베라 뉴욕 주 검찰청 대변인은 “뉴욕 시민들은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잘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시급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시점과 때를 같이해 이뤄지고 있다. 노조 결성을 위해 패스트푸드 포워드(Fast Food Forward)라는 연합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패스트푸드 포워드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변화를 위한 뉴욕 커뮤니티”의 대표 조나단 웨스틴은 “뉴욕 주 검찰청장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패스트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난 1년 넘게 늘 목격했거나 들어왔던 부당노동행위이다.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보면, 뉴욕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서 임금을 빼앗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푸드 포워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어느 정도로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한 연구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독립 조사기관을 통해 웬디스, 맥도날드, 파파존스, 버거킹 등을 포함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2012년에 임금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금 착취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배달 근로자들이다. 배달 근로자들은 업무를 위해 종종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자전거,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에 대해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거나, 근무 중 다치거나 강도를 당하기도 한다. 할렘에 위치한 파파존스에서 피자 배달을 하는 빈센트 가르시아 씨는 시급으로 5달러를 받는데, 그 시급으로는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2010년 봄에는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손님들이 지불한 400달러를 강도당하기도 했다. 강도를 당한 후에 가게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매니저는 그 금액을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가르시아 씨는 다음 날 그 금액을 바로 변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돈을 갚아야만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파존스 인터네셔널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노엘 스캇 씨는 맨해튼의 도미노피자에서 배달 일을 했다. 그는 시급으로 5.46달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피자박스 접기나 매장청소 등 팁을 받지 못하는 일에 배정을 받아서 여분의 팁 수입이 거의 없었다. 또한 그는 도미노피자가 고객이 신용카드에 포함하여 결제한 팁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그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뉴욕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다. 사용자는 팁을 받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팁을 포함해 시간당 최소 7.25달러(법정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팁 매킨티어 도미노피자 대변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 위치한 직영점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주거나, 팁을 시급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아마도 개별 프랜차이즈 대리점 일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할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 출처: New York Times, 2013년 5월 16일자, 'State Said to Be Reviewing Pay for Fast-Food Workers'



## 미국 : 뉴욕 퀸즈 지역 세차장 근로자들, 해고된 동료 위해 파업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조마(Jomar) 세차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4월 노동조합 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 한 명이 사용자와 다툼을 벌인 후에 세차장에서 해고되자 이들 세차장 근로자들은 6월 1일 파업에 나섰다. 사고의 발단은 이렇다. 그 전날인 5월 31일 아침, 세차장의 사장인 호세 파이레스 씨는 근로자인 퀴레르모 안주레스 씨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려고 했고, 안주레스 씨는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결국 이 근로자는 해고되었다. 사장인 파이레스 씨는 경찰에 폭행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안주레스 씨의 동료 근로자들은 이번 일이 지난 4월 노동조합 가입 찬반투표 이후에 사장이 근로자들에게 했던 여러 부당 행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월 1일 아침, 약 15명의 조마 세차장 근로자들은 해고된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해고근로자 안주레스 씨는 “우리는 단지 존중 받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는 항상 이를 요구했지만 한번도 존중받지 못했고,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차장 측 변호사인 데니스 랠리는 사장이 안주레스 씨를 밀치지 않았으며, 조만간 사장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과의 직접 인터뷰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세차장의 근로자들은 지난 4월 24일 노조가입 찬반투표 이후에 관리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기 시작

했으며, 일하는 동안에 따로 보관해 놓은 근로자들의 신발을 내다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해고근로자의 동료인 미구엘 포틸로 씨는 “노조 찬반투표 전까지 보통 하루에 12시간 일했는데, 투표 이후에는 4~6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차장 측 변호사인 랠리 씨는 그런 근로시간 조정은 노조 가입 투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차장에 세차하러 오는 차들이 줄어 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줄 수 없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조마 세차장은 도소매업·상점노동조합에 가입한 뉴욕 시의 6개 세차장 가운데 하나이다. 도소매업·상점노조는 오랜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히 일어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급여 인상을 위한 뉴욕 시 전체 노동운동의 일부로 설립되었다. 최근까지 뉴욕에서 이 노조와 협약을 맺은 세차장은 한군데도 없었으나 지난 2013년 5월 퀸즈 이스트 엘름허스트에 있는 하이텍 세차장의 사장이 처음으로 노조와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사용자가 2015년 말까지 시급을 9.18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하이텍 세차장이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노조와 협약을 체결한 세차장이라고 한다.

- 출처: New York Times, 2013년 6월 1일자, 'Carwash Workers in Queens Strike in Solidarity With Fired Colleague'

## 유럽

### 독일 : 실업률, 300만 명 이하로 감소

2013년 들어 증가하였던 독일의 실업률이 5월 들어 다소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업률은 7%를 넘었고, 실업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침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증가하는 계절적 실업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2012년 동 분기 대비 약 0.5% 정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었다. 지역별로는 구 동독지역이 10.3%, 구 서독지역이 6.0%의 실업률을 나타내어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 감소폭이 구 서독지역보다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적 실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5세 이하의 실업률도 4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현재 전체 실업률 대비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5.7%로 약 1만 명이 줄어든 26만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실업률 분포와 마찬가지로 2012년 5월 실업률과 비교하면 약 1만 명, 약

0.3%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의 통계상 추이를 보면 겨울철 증가하였던 실업률이 6월까지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노동청에 신청된 구인신청 건수를 보면 2013년 들어 신규고용 규모가 지난 2010년 가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신규고용시장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실업률 감소폭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경기 침체의 여파로 1/4분기 실업률이 2013년에 비해서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추세는 유럽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2013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연방노동청(BA) 언론보도용 자료, 2013년 5월 29일자, 'Der Arbeitsmarkt im Mai: Solide Entwicklung in schwierigem konjunkturellen Umfeld'

### 스웨덴 : 노령연금 실시 100주년

2013년 5월 21일은 스웨덴에 노령연금이 도입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스웨덴의 고령자들은 노

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67세 이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가난한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노령연



금제도 도입 당시 스웨덴처럼 모든 연금 생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노령연금제도 실시 초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연령은 높은 반면 평균 수명은 많이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연금의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노동기간과 임금에 비례한 부가연금(ATP)이 실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노령 생활이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65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 법률에 의하면 연금은 61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1938년 출생자들의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한 비율이 3.6%인 반면 1948년 출생자들의 경우 6.1%로 신청자 비율이 증가했다.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이 정상 연금액보다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스웨덴 연금 생활자들

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연금 생활자의 수준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히 저하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년간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들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스웨덴 국가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 출처: 1. Dagens Nyheter, 2013년 5월 21일자, 'Betydande risker med att plocka ut pensionen tidigt'
- 2. Dagens Nyheter, 2013년 5월 21일자, 'När vi lever längre ställs högre krav'
- 3. Svenska Dagbladet, 2013년 5월 22일자, 'Statliga anställda arbetar allt längre'

## 영국 :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 20년 만에 최고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조사위원회(ESRC)와 고용훈련위원회(UKCES)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2년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지난 조사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정부의 긴축예산을 근거로 공공부문 임금삭감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과 고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1994년부터 6년 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2012년 보고서는 20세부터 60세까지 3,000명의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형식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업장 구조조정 시 가장 큰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고강도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 저하가 모든 사업장에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란시스 그린 교수는 2008년 불황으로 인하여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안정된 양질의 근로로 여겨지던 공공부문에까지 부당한 처우가 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후 위축된 경제상

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사 결과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재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에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런 시기일수록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출처: CIPD 뉴스, 2013년 5월 20일자, ‘Work fear at 20-year high, finds research’

## 영국 : ‘호출형 근로’ 불법화 압력 높아져

영국 정부가 호출형 근로계약(zero hours contracts)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에 처해 있다. ‘초단기계약’ 혹은 ‘영시간 계약’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호출형 근로계약은 최소한의 근로시간 혹은 임금에 대한 보장도 없이 사용자의 호출에 언제든지 응해야 하는 근로계약 형태를 일컫는다.

최근 많은 사용자들이 호출형 근로계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비난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발표된 영국 통계청(ON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12월 3개월 동안 호출형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는 20만 명으로, 2007년 같은 기간(13만 1

천 명)과 2009년 같은 기간(15만 명)에 비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전 재무부 대변인이었던 자유민주당 상원의원 오크숏의 서면질의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이다. 통계청(ONS)의 글렌 왓슨 씨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고용계약 형태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는 실제보다 적게 잡힌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국 국회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상원은 26명의 식당 근로자와 의회 의사록 기록 등에 종사하는 19명의 근로자를 호출형 근로계약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출형 근로실태에



관해 질의를 한 상원의원 오크숏은 이러한 근로형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호출형 근로계약은 부두에서 임시직들을 고용하던 평가가 좋지 않은 과거의 낡은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임금 등에서 아무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호출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자체를 경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오크숏 상원의원은 상원 내에서도 이러한 호출형 근로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고 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호출형 근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출형 근로계약은 상점이나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NHS)에서도 그 수는 지난 2년 동안 25%가량 증가해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간호사나 보조인력들이다. 전문가들은 호출형 근로계약의 확산이 더블딥 불황 기임에도 실업이 예상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이 계약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영국노총(TUC) 프란세스 오그레디 사무총장은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호출형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사용자들은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호출형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계약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된 근로시간 보장을 갈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일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2013년 5월 24일자, ‘Pressure grows on Government to outlaw ‘zero hours’ contracts as it is revealed Parliament uses them too’

### 프랑스 : 근로계약 합의해지 건수 폭등에 의문점 야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2008년 8월 신설된 이후로 매우 빈번히 사용되어 고용관련 통계에서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만큼이나 주된 실업의 이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11.4%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실업자가

된 경우였다. 같은 시기,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는 10.8%로 약간 낮았다. 이는 2013년 4월 30일 발표된 프랑스 실업보험관리기구(UNEDIC)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진 사실과

조금 다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센터에 새롭게 등록된 경우 중 여론의 집중을 받은 공장들의 폐쇄와 재고용계획에 의한 실업자의 등록은 사실상 일부에 불과했다. 실업으로 연결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주로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직의 계약종료인 것으로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51%의 수당수령자는 파견근로직이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자가 되는 이유는 과실이나 직업적 무능(21.2%) 등의 개인적인 이유와 합의 해지였다.

합의해지는 이에 적대적이었던 프랑스노총(CGT)을 제외한 다른 노조들과 사용자측 간에 체결된 2008년 협약에 의해 신설되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110만 건이 넘는 합의해지 절차가 노동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프랑스 인사부장 연합(Association nationale des DRH)의 회장인 장 크리스토프 시베라에 따르면 합의해지는 전국적으로 다수에 의해 사용되었다. 조치가 매우 유연하고 회사를 떠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실업수당 외에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노총(CGT) 연맹보좌관 에릭 오방

은 합의해지에도 부작용이 있다고 성토했다.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떠나게 하기 위한 용도로 합의해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의해 일찍부터 과도한 업무로 쇠약해져버린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과 산림업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합의해지를 통해 사용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계획에 따라 시 부과될 수 있는 각종 의무들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젊은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합의해지에 동의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노동부는 점차적으로 합의해지의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올해 초부터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자의 보상금이 사용자측 부담금(forfait social)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피달 로퐁의 실뱅 니엘은 합의해지 제도가 사용자측에게 고비용이 됨으로써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출처: Le Monde, 2013년 5월 3일자, 'Le boom des ruptures conventionnelles suscite des questions'

## 프랑스 : 유럽집행위원회, 프랑스의 개혁 우선분야 6개 목록 제시

유럽집행위원회는 5월 29일,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감축하는 기한을 2013년이 아닌 2015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6개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을 프랑스에 요구했다.

유럽집행위원회 경제통화부문 위원인 올리 랭





(Olli Rehn) 은 지난 프랑스 대선 이후 발표되었던 계획들에 머무르지 말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올리 랭은 갈로아 보고서(rapport Gallois)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경쟁력을 위한 협정(le pacte pour la compétitivité)과 노사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해 채택된 고용에 관한 협약(l'accord sur l'emploi)을 좋은 예로 들었다.

개혁을 요구한 분야는 유럽연합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 분량은 지난 2012년 5월의 권고사항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으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6개의 우선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퇴직, 노동시장, 임금, 서비스업의 자유화, 기업환경, 조세제도가 6개의 우선분야이다.

**퇴직연금제도: 분담금 인상을 제외한 모든 부문 개혁**

유럽집행위원회가 요청한 퇴직 시스템의 개혁 조치들은 프랑스 정부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가 2020년까지 지속적인 균형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당장 적용 가능한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법정퇴직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는 이미 프랑스 정부에 의해 배제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분담금 납입 기간을 늘릴 것을 권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그 실행을 위한 정확한 기일이나 실행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집행위원회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증가하는 연금의 물가연동제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에 들어갔으나 여론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관계로 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집행위원회는 덧붙여 퇴직연금제의 특별제도도 개혁할 것을 권장했다. 요컨대,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개혁할 것을 프랑스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부분까지 인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비용의 삭감**

집행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 발효된 “경쟁력을 위한 세액 공제 제도(Cice)”가 노동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다만 다른 조치들이 이 제도와 충돌하여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 나아가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하는 다른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ice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기업들의 세금은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최저임금(SMIC)의 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좋은 정책이 아니었으며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그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저임금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더 이상 노동비용을 삭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Cice로 2015년까지 매년 200억 유로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개혁에도 지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기업환경 개선

집행위원회는 기업환경과 관련해 특히 기술개발과 수출 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이전과 연구의 상업적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13년 4월 발표한 "단순화 충격(근로자가 50명 이하인 기업의 회계장부 공표의무 폐지가 그 골자)"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경쟁력 분야와 관련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을 옹호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전환에 대한 조치들도 곧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조치의 현대화 정책(MAP : 공공지출의 감축, 공공정책의 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지원 정책의 개편과 기업지원의 합리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서비스업 : 경쟁의 강화

집행위원회는 서비스업분야에 있어 2012년에는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할당제 폐지 등의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법령으로 규제되는 직업군(택시, 공증인, 약사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전체에 경쟁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일요일 개장 문제 등 상점들의 개장시간 관련 법규를 단순화하거나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덤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장했다.

## 조세제도의 단순화 · 합리화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조세제도가 불안정한 성격과 수많은 면세제도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세율은 낮게, 과세 표준을 넓게 잡는 조세 전략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채가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조세 우대조치 등을 제안했고 2013년 하반기에 예정된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환영했으며 환경세 인상 또한 권고했다.

## 실업보험관리공단(Unedic) : 수당의 체감(遞減) 지급

최근 채택된 고용안정화 법안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진일보이지만 즉시 실행에 옮기는 일이 남았으며 노동시장의 분절을 개선하기 위한 보충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고용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보험관리공단의 적자인 회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조속히 실업보상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실업수당 조건, 수당의 시간에 따른 체감성(遞減性)과 가장 높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 등이 고용촉진을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합치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악화를 감안할 때 실업보험에 적용되는 규율들의 재교섭 또한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 출처: Les échos, 2013년 5월 30일자, 'Les six chantiers que la France doit mener en priorité selon la Commission européenne'



아시아

일본 : 파견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2년 12월 파견근로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파견사업주(1만 개 사업장), 파견근로자 10명 이상 사용사업주(2만 개 사업장), 파견근로자(2만 명)이다. 이 중 파견근로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파견근로자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회답자는 2,088명(회수율 10.9%)이었다.

먼저, 파견근로자가 파견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3개까지 선택), '정규직을 찾을 수 없어서'가 22.7%, '일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서' 18.2%, '특별한 이유는 없다' 17.8%, '근무지, 근무기간,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16.8%, '전문 지식을 살릴 수 있어서' 15.9%, '사생활과 양립이 가능해서' 11.0% 등의 순이었다.

파견근로자의 능력이나 기능을 취득하는 방법을 보면, '파견사업주 사업장에서의 OJT'가 4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견근로를 시작하기 전의 직장 경험'이 32.4%, '파견사업주의 Off-JT' 23.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능력이나 기능을 취득하여 경력상승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59.1%, '없다'는 40.9%이었다. 경력 상승이 가능한 이유를 보면, '일이 고도화되거나, 일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가 6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의 권한이 넓어지거나 책임 있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어서' 29.5%, 그리고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 25.3%였다.

현재, 파견회사에 대한 불만을 보면, '특별히 불만은 없다'가 38.8%였는데,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내용을 보면, '고용/수입의 불안정'이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견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다' 17.0%였다. 반면 현재 파견사용사업주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보면, '특별히 불만은 없다'가 58.1%였는데, 불만 내용을 보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가 15.1%로 가장 많았고, '휴가를 내기 힘들다' 13.6%였다.

앞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보면, '현재의 고용형태 유지' 41.6%,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 41.0%로 거의 같은 비율로 파견과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 그 외에 '파견회사에서 무기고용으로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싶다' 8.6%, '무기고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준사원으로 일하고 싶다' 5.9%, '독립/창업하고 싶다' 5.6%, '파견회사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싶다' 5.1%였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일이나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5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9.0%,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쌓아 경력상승을 지향한다' 33.7% 등의 순이었다.

한편 현재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고용 기간의 정함이 있다'

가 63.5%로 많았고, '고용 기간의 정합이 없다'는 36.5%였다. 기간의 정합이 있는 자의 고용기간을 보면, '30일 초과 3개월 이내'가 2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6.7%,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4.3%, 그리고 '1년 초과 3년 이내'가 8.3%였다.

- 출처: 일본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 홈페이지, Business Labor Trend 5월호, '労働者派遣: 四割超が正社員での就労を希望—厚労省の実態調査', <http://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13/05/044-045.pdf>

## 일본 : 법무성, 재범률 저하를 위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일본 법무성은 지난 2013년 5월 10일, 보호관찰 중인 소년을 법무성의 임시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부처로서는 처음 있는 시도이다. 법무성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고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니가키 사다카즈 법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호관찰 중인 10대 소년 1명을 채용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소년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문서정리나 컴퓨터 데이터 입력, 전화응대 업무를 담당한다(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하지 않음). 근무일수는 주 4일 이내로, 일급은 다른 임시직원과 같은 수준인 약 7,000엔(월 10만 엔 정도) 수준이며, 고용기간은 최장 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의 취로지원이 헬로워크나 면접에 동행해 구직을 지원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찾을 경우 그

시점에서 법무성과의 계약은 중지되며, 보호관찰소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새로운 보호관찰 중인 소년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성의 담당자는 현재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채용자 수를 향후 성과를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성의 2011년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 종료시점에서 무직자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7%로, 취직자일 경우 재범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무성은 적극적인 취업지원의 제공이 재범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2010년 8월 이후, 오사카부 스이타시나 지바현 카츠우라시 등 여덟 개 시가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8명의 채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재범방지를 향한 종합 대책’을 책정하였으며, 출소 후 2년 이내에 다시 형



무소에 들어가는 자의 비율을 10년간 20% 이상 줄이겠다는 수치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갱생보호학회장 후지모토 데츠야 중앙대 명예교수는, 형무소나 소년원을 나온 자에 대한 고용 확보조치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무성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법무성의 조치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을 고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보호관찰대

상자의 고용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보호관찰대상자의 피해자 측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재범방지와 피해자 대책은 다르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NHK 뉴스, 2013년 5월 10일자, '保護觀察対象者の社会復帰支援 法務省 臨時職員に雇用 再犯率低下へ'

### 중국 : 중등소득계층 비중 23~25%

중국 하이난(海南) 개혁발전연구원은 2010년부터 중등소득계층의 확대방안과 소득분배개혁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해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중등소득단계에서 고소득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고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소득분배 개혁에 성공한다면 2020년까지 중국 총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현재 중국의 중등소득계층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3~25%에 해당하는 약 3억 명 정도이고, 중국 경제구조는 이미 산업화 중후반기로 진입했지만 사회구조와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산업화 초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구조는 약 15년 정도 낙후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내 소득구조 면에서 보면, 50% 이상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분기를 예로 들면, 중국 도시지역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6,796 위안으로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9.8%이고, 이 중 중위수는 5,658위안이다. 또한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2,560위안으로 실질증가율은 12.7%이며, 이 중 중위수는 1,876위안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의 중위수는 평균값보다 크게 낮았고, 50% 이상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평균보다 낮았다. 즉 저소득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 중등소득계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국가와 지역의 중등소득계층의 비중은 대체로 70% 이상으로 중국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계층이 모두 중산계층으로 전체 사회 인구의 90%를 차

지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과 동일한 발전수준의 시기와 비교해도 중국의 중등소득계층은 지나치게 낮다. 2011년 중국 1인당 평균 GDP는 5,000달러를 넘어섰고, 이 수준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1970년대 초 1인당 평균 GDP가 5,000달러에 이르렀을 때

중산가정의 비중은 60% 이상이었고, 일본은 1970년대 중후반기에 90%의 일본인이 중산계층이라고 스스로 여겼으며, 한국은 1980년 말 중산계층의 비중이 40%에 이르렀다.

• 출처:中国网, 2013년 4월 23일자, ‘中国中等收入者料达6亿 专家吁加快农民工市民化’

## 중국 : 경제둔화로 취업난 가중

중국에서 민생의 근본인 취업문제에 다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5월 14일 시진핑 총서기는 톈진에서 취업업무 관련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경제성장 없이 취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경제발전의 파이를 키워 취업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중국 일반대학 졸업생 수는 69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명 증가했다. 2011년과 2010년의 대졸자 수는 각각 660만, 630만 명으로 지난 3년 전과 비교하면, 대졸자 수는 70만 명 증가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은 오히려 2010년 10.3%(GDP)에서 2012년 7.8%로 둔화되었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GDP 성장률이 1% 하락하면, 1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 또한 GDP 성장률이 1% 상승하면 80만~3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국 교육부는 현재 중국경제가 불안정하여 거시적인 취업난이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업난은 이미 베이징, 상

하이, 톈진,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나타났다. 상하이 교육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5월 10일까지 올해 상하이 대졸자의 취업률은 44.4%로 2012년 동기 대비 2% 하락했다. 베이징의 경우 4월 중하순까지 대졸자 취업률은 28.24%로 기업의 일자리 수요 감소라는 공통원인을 제외하면 문과 졸업생의 취업난이 이과 졸업생보다 높았고, 문학, 역사, 경제, 관리 등의 전공에 있어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둥성의 경우, 2013년 4월 현재 졸업자의 취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낮아졌다. 광둥성 교육청은 현재의 취업형세는 2008년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21세기 교육발전연구원 씨용빙지 부연구원장은 일부 인문사회과학 졸업생의 취업이 냉대를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학교의 맹목적인 대규모 입학생 모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중국 대학원(석사) 지원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 대학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며 대학원생 교육을 대졸자 취업



난 해결의 활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전형적으로 취업난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난이 올해 졸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졸업자 및 기타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12차 5개년' 기간 동안 도시지역에 연간 2,50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수는 1,200

만 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경제성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고, 올해 GDP 성장률을 7.5%로 확정된 것은 취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둔화의 범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中人网, 2013년 5월 15일자, '经济放缓就业承压 各方对症寻良策'